조사연구자료

이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서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 및 시사점

2024. 10

한국은행 충북본부

작성자 : 팀장 김광민, 과장 백승수, 조사역 안시완, 청년 인턴 김준식

- 차 례 -

〈요 약〉

Ⅰ. 검토 배경 ····· 1

Ⅱ. 충북지역 혼인 및 출산 동향 ····· 3

1. 혼인 동향 ····· 3

2. 출산 동향 ····· 5

Ⅲ.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 ····· 7

1. 인구적 요인 ····· 7

2. 제도적 요인 ····· 9

3. 거시적 요인 ····· 13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6

1. 종합평가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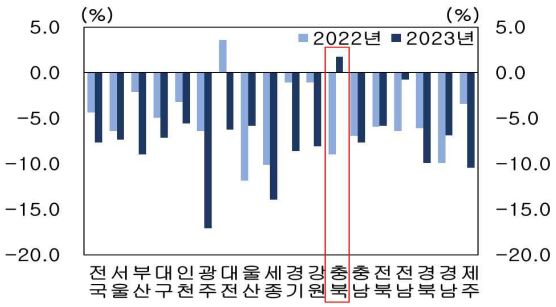
2. 시사점 ····· 17

〈참고문헌〉

< 요 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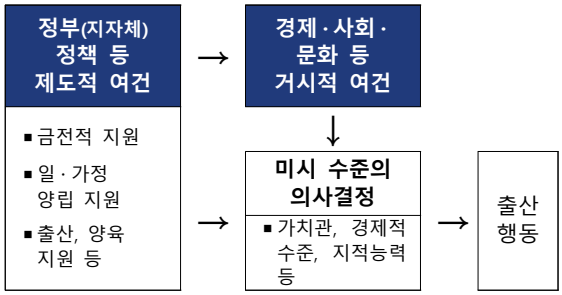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중 충북은 출생아 수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증가로 전환되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출생아 수 증가 전환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충북지역 혼인 및 출산 동향을 살펴보고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을 인구·제도·거시적 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시·도별 출생아 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개인의 출산 행동 결정요인



자료 : Philipov et al.(2015, 수정)

충북지역 혼인 및 출산 동향

2. **2022년 충북지역 혼인 건수는 6.2천 건으로 2021년(5.9천 건)에 비해 5.2% 늘어나며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으로 혼인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는 0.4% 늘어나며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3. **2022년 중 혼인 건수가 늘면서 2023년 충북지역 출생아 수(7.6천명)가 증가로 전환(+1.7%, 전년대비)되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0.87에서 0.89로 소폭 상승하였다.

충북지역 혼인 건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충북지역 출생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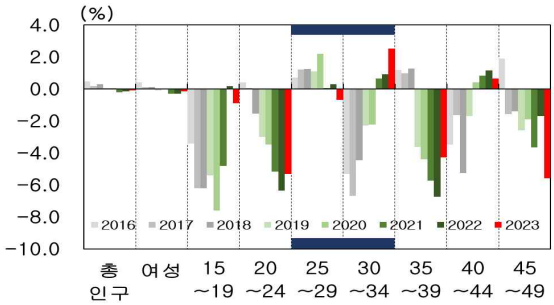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

5. **(인구적 요인) 2020년 이후 충북은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여성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동 연령대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인 1991~1995년생이 포함된 데 주로 기인한다. 다만 충북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인구 순 유입*도 일부 기여하였다. **또한 충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2021년 이후 25~34세 여성 인구의 혼인 비중(1천명 당 혼인 건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 25~29세는 2023년 중 146명, 30~34세는 2016~2023년 중 818명 순 유입

충북 연령대별 여성 인구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25~34세 여성 인구의 혼인 비중[1)]

	충북	전국
2019년	52.9	48.3
2020년	49.6	44.1
2021년	43.6	39.1
2022년	44.9	38.2
2023년	45.2	38.2

주 : 1) 1천 명당 혼인 건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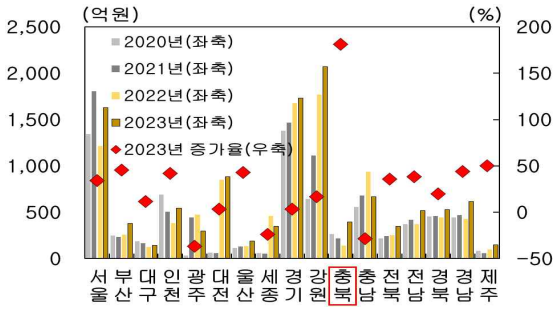
6. **(제도적 요인) 2023년 충청북도는 245억원 규모의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면서 출산 지원에 정책을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의 2023년 출산지원 정책 예산은 전년에 비해 181.3% 늘어나며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7. **타 시·도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지원금과 출생아 수 증가율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8. **2019년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거나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강원, 광주, 대전의 경우 정책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당해 년(각각 2019년, 2021년, 2022년)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거나 합계출산율이 상승하였으나 3개 시·도 모두 다음 해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도 하락하였다. 충북의 경우에도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2023년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다가 2024년 1~7월 중에는 감소(-4.8%, 전년동기대비)로 전환되었다.

9. **국내 선행연구는 대체로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주요국 사례 연구도 출산지원금은 대체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연구는 효과가 작거나 지속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현금지원 방식인 출산지원금 정책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출산지원정책 예산 규모



자료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1)]

▸ 음영은 각 시·도별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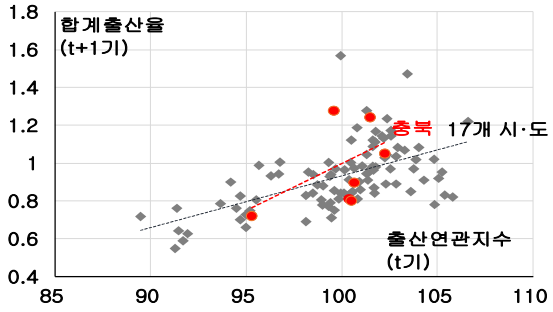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p
출생아 수 증가율(%)	강원	-0.8	-5.4	-6.1	-1.1	-7.9
	광주	-8.1	-12.5	+8.7	-6.4	-16.7
	대전	-9.9	-11.0	-0.9	+3.5	-6.2
	충북	-11.8	-7.8	-4.8	-9.0	+2.0
합계출산율 변동 (명/가임여성 1명당)	강원	+0.01	-0.04	-0.06	-0.01	-0.08
	광주	-0.06	-0.10	+0.09	-0.06	-0.13
	대전	-0.07	-0.07	0.00	+0.03	-0.05
	충북	-0.12	-0.07	-0.03	-0.08	+0.02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 또는 변동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0. **(거시적 요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경제·사회·문화)를 종합지수화한 「출산연관지수」를 산출한 결과, 충북은 동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17개 시·도에서 출산연관지수(t기)와 합계출산율(t+1기) 간에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가운데 충북지역 출산연관지수는 2021년에 상승 전환 후 2022년에는 상승폭이 확대(20년 -0.2% → 21년 +0.3% → 22년 +1.2%*)되었다. 경제, 사회·문화 부문 모두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 부문에서는 가구당 소득 증가가,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비중 축소(일·가정 양립 여성 증가)가 출산연관지수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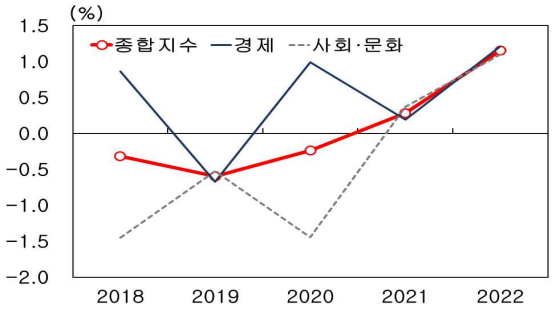
*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음

출산연관지수(t기)와 합계출산율(t+1기)



주 : 1) 출산연관지수는 2017~2022년, 합계출산율은 2018~2023년
자료 : 통계청, 자체 시산

충북 출산연관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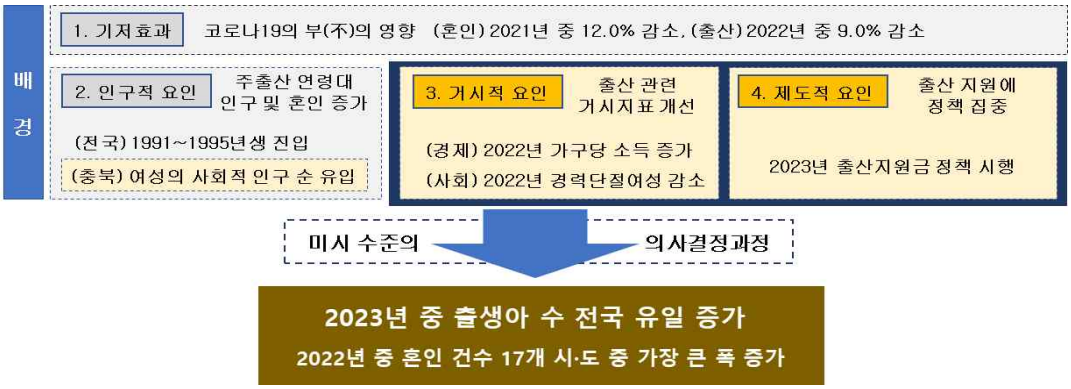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자체 시산

종합평가 및 시사점

11. **2023년 충북지역 출생아 수의 증가 전환은 ①기저효과와 ②인구적, ③거시적, ④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①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약을 받았던 혼인과 출산이 이연되어 나타난 측면이 있는 가운데 ②2020년부터 주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혼인 비중이 상승하였다. 또한 ③2021년부터 출산과 관련된 지역 내 거시적 여건이 점차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여건하에서 ④2023년 충청북도는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출산지원정책을 출산 유도에 집중하였다.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



12. **충북은 출생아 수 증가 전환 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거시적 여건을 개선하는 가운데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고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축소와 여성 인구 순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 인프라 및 돌봄서비스 등 비현금성 지원의 경우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충북형 맞춤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Ⅰ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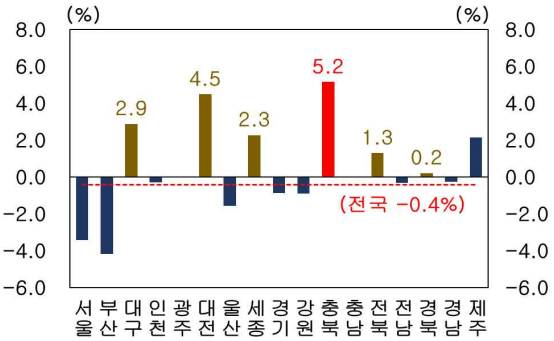
□ 해외 언론이 선진국의 출산율 하락 현상을 'South Koreanification'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심각

○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은 2022년 혼인 건수가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에는 출생아 수도 유일하게 증가

— 혼인 건수 증가율은 2021년 -12.0%에서 2022년 +5.2%로,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2년 -9.0%에서 2023년 +1.7%로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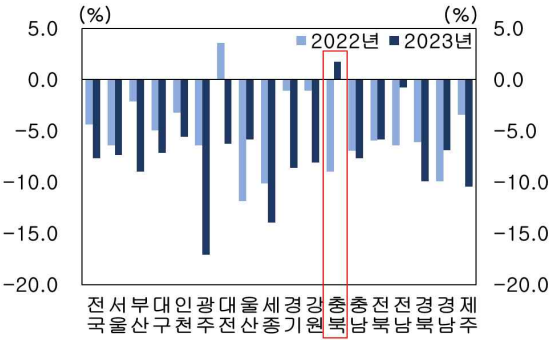
⇒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에 대한 차별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

혼인 건수 증가율(2022년)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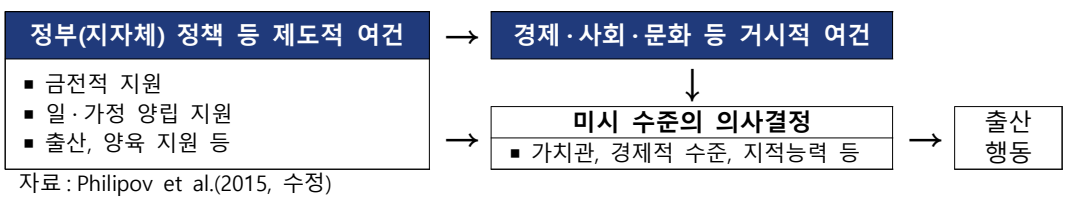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 본 보고서에서는 충북지역 혼인 및 출산 동향을 살펴보고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을 인구적, 제도적, 거시적 여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부(지자체) 정책 등 제도적 여건과 경제·사회·문화 등 거시적 여건하에서 가치관 등 미시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출산을 결정(<참고1>「개인의 출산 행동 결정요인」참조)

개인의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자료 : Philipov et al.(2015, 수정)

<참고1>

개인의 출산 행동 결정요인

□ 개인은 정부(지자체) 정책 등의 제도적 여건과 경제·사회·문화 등 거시적 여건에 영향을 받아 출산 의사와 연관된 미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출산을 결정(Philipov et al.(2015))

○ 개인의 출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여건은 정부(지자체) 정책의 제도적 여건에 의해 크게 좌우*

* 박아연(2017)은 OECD 33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 수준과 가족 관련 정부지출이 장기적으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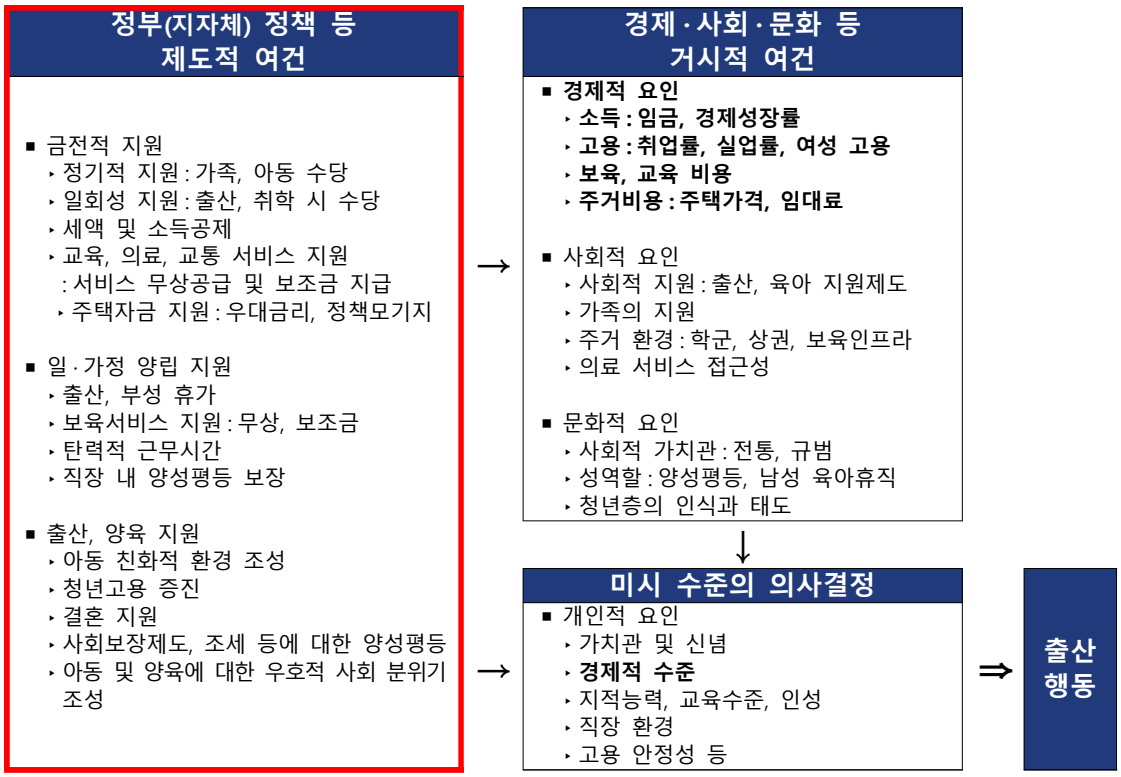
— 제도적 여건은 금전적, 일·가정 양립, 출산·양육 지원 등으로 분류

○ 다양한 거시적·미시적 여건 중 경제적 요인*은 소득, 고용, 보육 및 교육 비용, 주거비용 등을 고려

* Becker(1960)는 개인의 출산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접근

► 개인의 출산 행동은 주어진 소득 및 자산 여건하에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직접비용(식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과 육아에 따른 간접비용(육아로 인한 휴직, 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출산 행동 결정요인



자료 : Philipov et al.(2015, 수정)

Ⅱ 충북지역 혼인 및 출산 동향

1. 혼인 동향

□ 2022년 충북지역 혼인 건수는 6.2천 건으로 2021년(5.9천 건)에 비해 5.2% 늘어나며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그동안의 감소세 지속*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연령대(여성 기준)에서 고르게 증가

* 2011년 9.5천 건에서 2020년 6.7천 건으로 연평균 3.8% 감소하였으며, 2021년 중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0%까지 줄어들며 감소세가 더욱 확대

<참고2>「충북지역 혼인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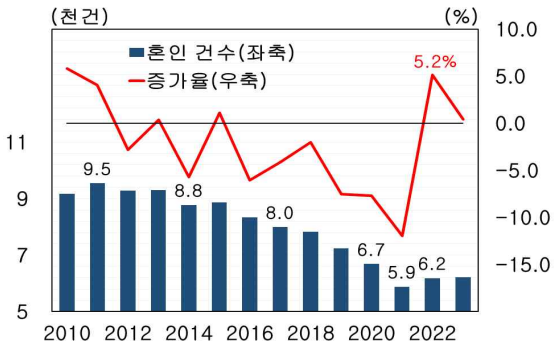
— 30~34세는 증가 건수의 30.0%, 35~39세는 22.1%, 40~44세는 16.5%, 25~29세는 12.2%를 차지

○ 2023년(6.2천 건)에는 0.4% 늘어나며 소폭의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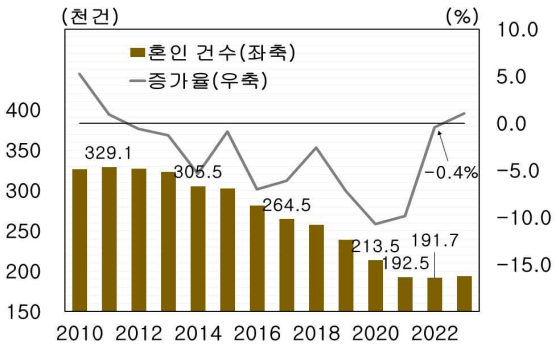
□ 전국의 경우 감소세 확대가 이어지다 2022년에 감소폭이 크게 축소(21년 -9.8% → 22년 -0.4%)된 후 2023년(+1.0%)에는 증가로 전환

혼인 건수

<충북>



<전국>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참고자료】충북지역 혼인 건수의 연령대(여성 기준)별 비중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 2021년	0.4	7.3	35.4	27.0	10.7	10.7	5.3	4.5	3.9	3.1
■ 2022년	0.9	7.3	34.3	27.2	11.2	11.2	5.8	4.4	4.2	2.4
■ 2023년	1.1	7.0	32.7	29.4	11.1	6.1	4.0	3.6	2.2	2.8

(시·도별)

□ **(2020~2021년)** 추세적 요인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더해지면서 대구(연평균 -14.1%), 울산(-13.4%), 전북(-12.8%), 경북(-12.4%) 등 9개 시·도의 혼인 건수가 1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전국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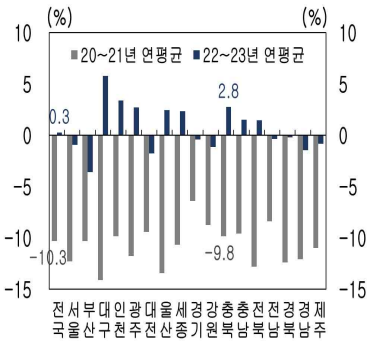
○ 나머지 8개 시·도의 경우에도 상당폭 감소(충북 -9.8%)

□ **(2022~2023년)** 대구(연평균 +5.8%), 인천(+3.4%), 충북(+2.8%), 광주(+2.7%), 울산(+2.5%) 등 8개 시·도의 혼인 건수가 증가(전국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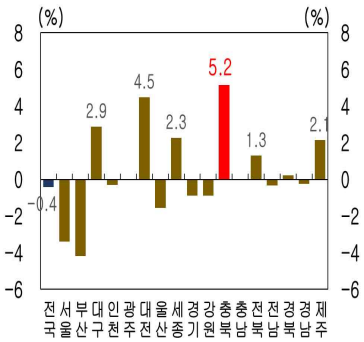
○ 대구(22년 +2.9% → 23년 +8.7%), 광주(+0.0% → +5.4%) 등은 증가폭이 확대되고 인천(-0.3% → +7.1%), 울산(-1.6% → +6.5%) 등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충북(+5.2% → +0.4%)은 증가폭이 축소(전국 -0.4% → +1.0%)

시·도별 혼인 건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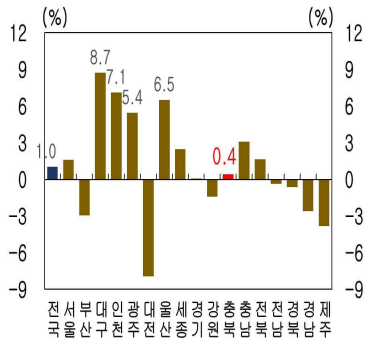
<2020~21년, 2022~23년>



<2022년>



<2023년>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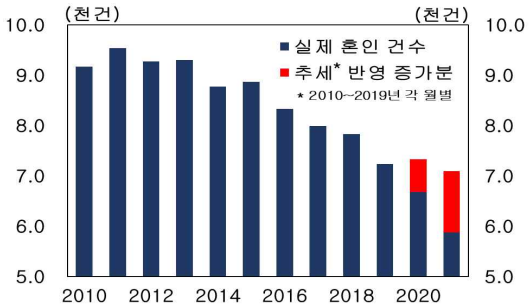
<참고2>

충북지역 혼인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

□ 2020~2021년 중 충북지역 혼인 건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약 1.5천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010~2019년 중 월별 추세가 2020년, 2021년에도 지속된다고 가정

충북 혼인 건수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 출산 동향

□ 2023년 충북지역 출생아 수는 7.6천 명으로 2022년(7.5천 명)에 비해 1.7% 늘어나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

○ 혼인 감소와 함께 감소세를 보이던 출산*은 2022년 혼인 건수 증가 전환 이후 2023년에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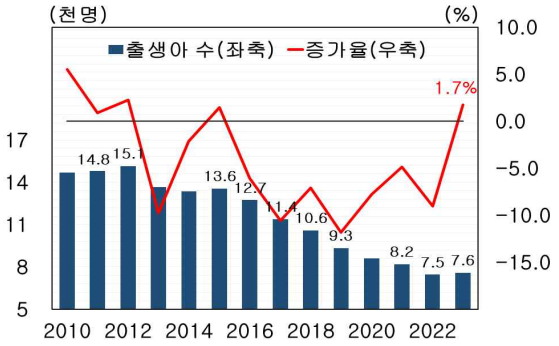
* 특히 2015년(13.6천 명) 이후 매년 천여 명씩 줄면서 2022년 7.5천 명까지 감소

** 혼인과 출산은 정(正)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남(<참고3>「충북지역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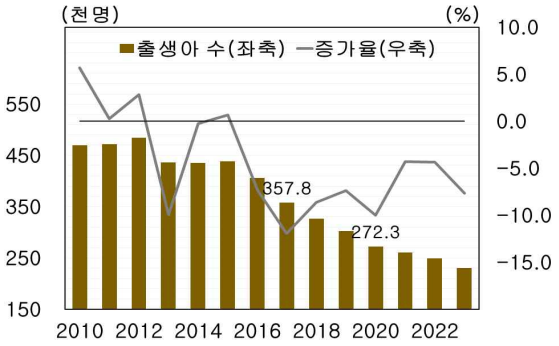
□ 반면 전국의 경우 출생아 수가 2017년(357.8천 명)에 30만 명대로, 2020년(272.3천 명)에 20만 명대로 줄어든 후 2023년에도 큰 폭의 감소세 지속

출생아 수

<충북>



<전국>



주 : 2023년은 잠정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시·도별)

□ 2016년 이후의 시·도별 출산 변동을 보면,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지속

○ 다만 광주(20년 -12.5% → 21년 +8.7% → 22년 -6.4%)는 2021년에, 대전(21년 -0.9% → 22년 +3.5% → 23년 -6.3%)은 2022년에 일시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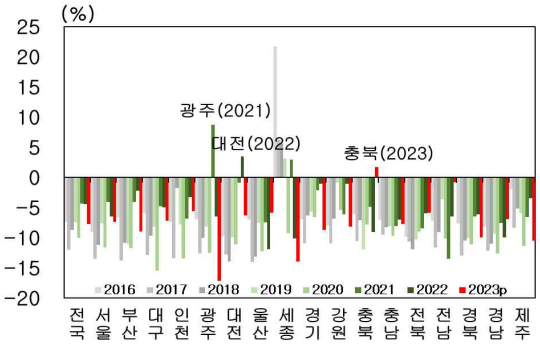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도 같은 시기 반등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다시 하락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

○ 충북은 2023년 중 증가 전환(22년 -9.0% → 23년 +1.7%) 후 2024년 2월부터 다시 감소(24.1~7월 -4.8%,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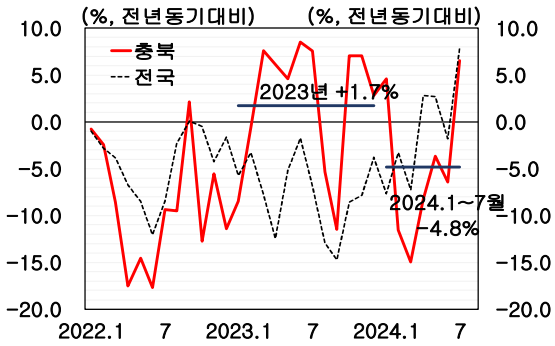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도 2022년 0.87에서 2023년 0.89로 소폭 상승

시·도별 출생아 수 증가율(연도별)



주 : 1) 2023년은 잠정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율(월별)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

(명/가임여성 1명당)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p
전국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광주	1.17	1.05	0.97	0.91	0.81	**0.90**	0.84	0.71
대전	1.19	1.08	0.95	0.88	0.81	0.81	**0.84**	0.79
충북	1.36	1.24	1.17	1.05	0.98	0.95	0.87	**0.89**

주 : 1) 2023년은 잠정 2) 붉은색은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상승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참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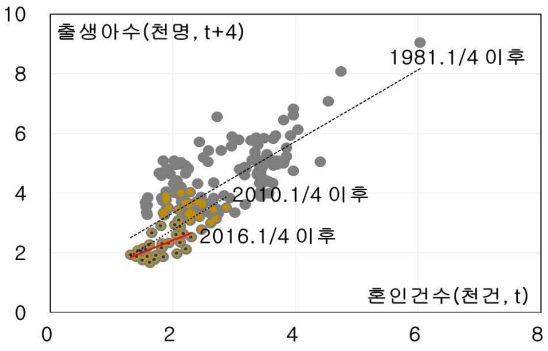
충북지역 혼인과 출산의 상관관계

□ 충북지역 혼인 건수(t)와 출생아 수(t+4)의 상관계수(1981.1/4~2024.1/4)는 0.76으로 정(正)의 상관관계가 높음

○ 다만 최근 시계에서 상관관계가 약화되는 모습

■ 81.1/4 이후 0.76, 10.1/4 이후 0.67, 16.1/4 이후 0.58

충북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분기)



자료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Ⅲ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

1. 인구적 요인 :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증가 및 혼인 비중 상승

□ 2020년 이후 충북은 주출산 연령대인 25~34세 여성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의 증가세가 지속

▶ 충북지역 25~34세 여성 인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인구(천 명)	83.9	83.9	84.2	84.7	85.4
■ 증가율(%)	-0.59	+0.01	+0.34	+0.60	+0.87

○ 2019년부터 전체 여성 인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29세는 2016~2022년 중 연평균 0.97%(누적 2.9천 명), 30~34세는 2021~2023년 중 1.37% 증가(1.7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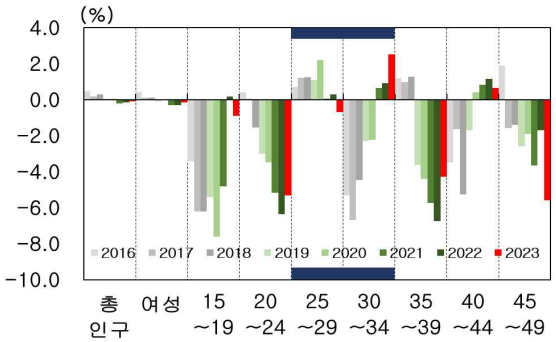
—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동 연령대에 우리나라의 한 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여아는 33만 명)을 일시적으로 회복하였던 1991~1995년생(2023년 28~32세)이 포함*된 데 주로 기인(<참고4> 「충북지역 가임기간 연령대 여성 인구 변화」 참조)

* 2023년 충북지역 25~34세 여성 중 1991~1995년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에 달함(전국 51.9%)

○ 여기에 더해 충북의 경우 여성의 사회적 인구 순 유입도 일부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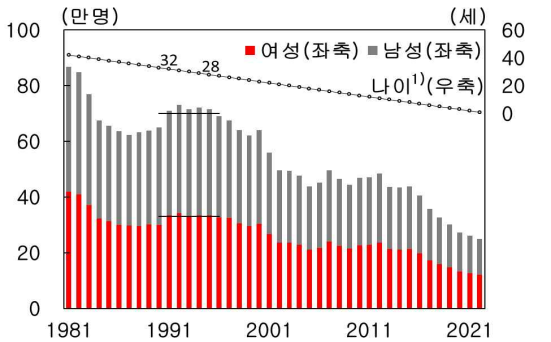
— 25~29세는 2023년 중 146명, 30~34세는 2016~2023년 중 818명 순 유입

충북 연령대별 여성 인구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출생아 수(전국)



주 : 1) 출생연도별 2023년 나이(출생 시 '0'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또한 충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가 크게 줄어든 2021년 이후 25~34세 여성 인구의 혼인 비중(1천명 당 혼인 건수)이 지속적으로 상승

○ 특히 2022년 중 동 연령대의 혼인 비중*이 전년에 비해 크게 상승** (동 연령대 여성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 +1.3건)

* 17개 시·도 중 세종에 이어 2번째 ** 대구에 이어 2번째

▶ 25~34세 여성 인구의 1천 명당 혼인 건수(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충북	52.9	49.6	43.6	44.9	45.2
■ 전국	48.3	44.1	39.1	38.2	38.2

<참고4>

충북지역 가임기간 연령대 여성 인구 변화

□ 충북지역 34세 이하 여성의 인구 변화는 1991~1995년생(우리나라 한 해 출생아 수가 70만 명 회복)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5~29세, 30~34세 연령대는 1991년생이 각각 25세, 30세에 진입한 2016년, 2021년에 증가로 전환

— 다만 30~34세의 경우 2021년, 2023년 중 인구 증가에 사회적 인구 유입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충북지역 연령별 여성 인구 변화

▸음영은 **1991~1995년생**이 연령별 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친 기간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5~19세	-106	-308	-840	-1,025	-1,671	-2,940	-2,767	-2,253	-2,996	-1,757	64	-306
순유입	-257	-162	-71	-208	-85	-13	-256	-100	-255	-319	-234	-193
20~24세	703	983	1,196	1,440	197	25	-748	-1,439	-1,622	-2,325	-2,704	-2,125
순유입	-933	-739	-854	-748	-1,164	-1,185	-1,460	-1,720	-1,934	-1,837	-1,105	-995
25~29세	-3,333	-1,965	-973	-489	286	500	518	463	929	26	132	-304
순유입	-349	-358	-367	-30	-303	-496	-519	-566	-303	-138	-23	146
30~34세	546	624	-2,236	-2,539	-2,664	-3,167	-1,972	-964	-919	260	377	1,039
순유입	271	176	142	-60	132	26	101	55	40	138	-43	369
35~39세	-1,092	-3,187	-1,032	-155	631	522	696	-2,013	-2,340	-2,924	-3,239	-1,920
순유입	214	124	-24	-90	195	-17	174	202	154	75	39	237
40~44세	-1,096	-948	-1,743	-1,375	-2,126	-968	-3,062	-941	216	445	633	354
순유입	277	139	35	-72	180	84	247	185	261	164	205	5
45~49세	-26	3,403	2,359	-241	1,249	-1,055	-927	-1,681	-1,204	-2,260	-1,018	-3,278
순유입	407	291	287	127	348	213	319	268	316	373	237	12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

2. 제도적 요인 : 출산 지원에 정책을 집중

□ 2023년 충북지역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393.8억원*으로 전년(140.0억원)에 비해 181.3% 늘어나며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

* 17개 시·도 중 10번째 규모로 지자체 전체 예산(11,443억원)의 3.4% 수준
  ▪ 인구 천 명당 예산(24.7백만원)은 17개 시·도 중 6번째 규모

○ 이는 충청북도의 245.0억원 규모 출산지원금 정책 시행에 주로 기인

— 예산 총 증가액(+253.8억원) 중 출산지원금 비중은 96.5% 수준

○ 이에 따라 생애 단계별 지원* 중 출산 관련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79.5%)하면서 충북의 출산 지원 예산 비중(86.2%, 출산지원정책 총예산 대비)이 17개 시·도 평균(66.5%)을 크게 상회

*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지원의 7단계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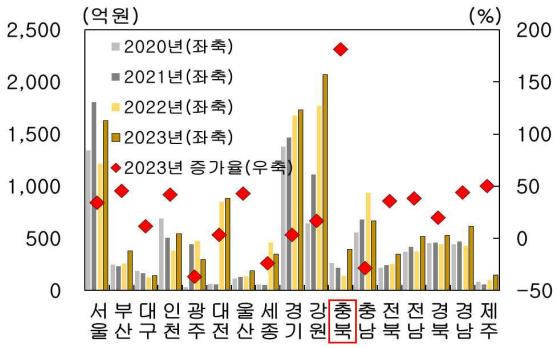
▶ 2023년 중 생애 단계별 출산지원정책 예산 증가율(%)

	결혼 전	결혼	임신 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 충 북	+6.1	+29.0	+19.7	-20.6	**+179.5**	+45.0	+15.2
▪ 17개 시·도 평균	+36.9	+11.8	+73.5	+121.9	-1.1	+10.7	+7.6

□ 출산지원정책 건수(총 116건) 기준으로도 출산 지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육아(27건), 결혼(11건), 가족(10건)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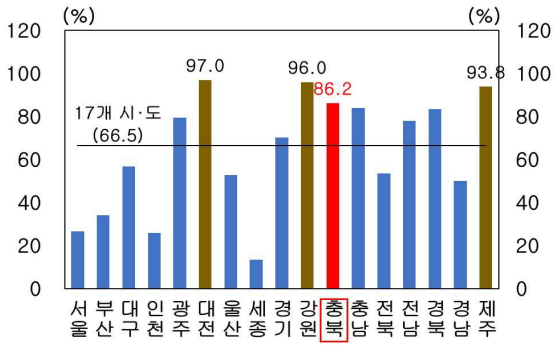
* 2023년 '출산/총 지원정책' 건수 비중은 41.4%로 17개 시·도 평균(34.4%)을 상회

출산지원정책 예산 규모



자료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출산 관련 예산 비중[1](2023년)



주 : 1) 출산지원정책 총예산 대비
자료 : 보건복지부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출산지원금 효과)

□ 타 시·도 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지원금과 출생아 수 증가율 간의 관계를 검토

【타 시·도* 사례】 제도 시행 당해 년 증가 후 다음 해 감소
⇒ 정책효과가 단기간에 그치는 모습

* 충북을 제외하고 2019년 이후 출생아 수가 증가하거나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지역(강원, 광주, 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봄

세종도 2019년과 2021년에 출생아 수가 증가(각각 +3.1%, +2.9%, 다만 합계출산율은 감소세 지속)하였으나 도시 형성기에 있는 세종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사례에서 제외

□ 강원, 광주, 대전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한 당해 년(각각 2019년, 2021년, 2022년)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거나 합계출산율이 상승

○ 다만 3개 시·도 모두 다음 해에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합계출산율도 하락

→ 충북도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2023년에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다가 2024.1~7월 중 감소(-4.8%, 전년동기대비)로 전환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동[1)]

▸**음영은 각 시·도별로 출산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시기**

		2019	2020	2021	2022	2023p
출생아 수 증가율(%)	강원	-0.8	-5.4	-6.1	-1.1	-7.9
	광주	-8.1	-12.5	**+8.7**	-6.4	-16.7
	대전	-9.9	-11.0	-0.9	**+3.5**	-6.2
	충북	-11.8	-7.8	-4.8	-9.0	**+2.0**
합계출산율 변동 (명/가임여성 1명당)	강원	**+0.01**	-0.04	-0.06	-0.01	-0.08
	광주	-0.06	-0.10	**+0.09**	-0.06	-0.13
	대전	-0.07	-0.07	0.00	**+0.03**	-0.05
	충북	-0.12	-0.07	-0.03	-0.08	**+0.02**

주 : 1) 전년대비 증가율 또는 변동치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선행연구】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 국내 선행연구는 대체로 출산지원금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일부 존재

* 효과의 크기는 분석 대상,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상이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결과	연구자	대상	분석 내용
긍정	최혜진 (2023)	전국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급액이 큰 경우**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시행 당해년 또는 차년도까지만 유지되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결과를 제시
	박혜림 (2023)	전국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급 시 합계출산율은 0.03명 증가**하고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 100만원 증가 시 합계출산율은 0.098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일시금 방식**의 출산지원금이 분할금 방식보다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며 1인당 250만원 미만의 **소액 지원은 출산율 제고가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
	이철희 등 (2022)	전국 기초 지자체	▪2019년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원의 유배우 출산율이 분석 기간 평균보다 15~20%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비교적 큰 액수의 현금지원
	이철희 (2022)	전국 기초 지자체	▪현금과 보육지원 정책은 **소득 중상위층 가구의 출산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침
	김우영 등 (2018)	충청 기초 지자체	▪충청지역의 출산지원금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이며, 그 효과는 **8년간 지속**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증가**하면 **출산율은 0.027명 증가**하나, 두 변수는 비선형 관계라서 **250만원을 초과**하면 출산율 **효과**는 **감소**
	Hong 등 (2016)	전국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1,000달러 증가**할 때 **조출생율**은 **4.4% 상승** ▪출생 순위가 낮아질수록 지자체 출산지원금의 효과가 감소
	박창우 등 (2014)	전국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평균 금액(2005~2010년)만큼 **증가**할 때 **첫째 자녀** 출생아 수가 **0.4%**, **둘째 자녀** 출생아 수는 **0.44% 증가**하며, 셋째 자녀 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출산지원금이 **일시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규모의 출산지원금 증가는 **첫째, 둘째 자녀의 수**를 각각 **2.63%, 2.25% 늘리는 것**으로 추정
부정	김민곤 등 (2016)	서울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수단은 여성의 출산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
	최분희 등 (2017)	15개 광역 지자체	▪지방정부의 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교육·보육 서비스 지원,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은 효과적
	석호원 (2011)	서울 기초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그리고 연령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국제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주요국 사례 연구*도 출산지원금은 대체로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

* <참고5>「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참조

○ 다만 일부 연구는 효과가 작거나 지속 기간이 일시적이어서 현금 지원 방식인 출산지원금 정책의 한계점을 제시

<참고5>

출산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

국가		연구 내용 및 결과
캐나다	내용	▪Milligan et al.(2005)은 1985~1997년 중 퀘벡지역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결과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출산 확률**이 **평균적**으로 **12%* 상승**하였으며,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서는 **추가적**인 **출산 가능성**이 **25% 증가** *88~97년 중 캐나다의 평균 출산율(1.65명) 기준 0.2명에 해당
	시사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집행**에 대한 **실증 근거**를 **제시**
스페인	내용	▪González et al.(2013)은 2007년 도입된 출산지원금 제도 시행이 임신과 낙태 횟수, 가구 지출 및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결과	▪정책 도입으로 임신 횟수가 증가하고 낙태 횟수는 감소하면서 **출산 횟수**가 **연평균 6%* 증가** *07~09년 중 스페인의 평균 출산율(1.42명) 기준 0.08명에 해당 ▪지급된 출산지원금이 자녀를 위해 지출되면서 **자녀 교육비**와 **건강비 지출**이 가족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 ▪다만 **저학력·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모(母)의 노동참여율**은 **1.5% 감소**
	시사점	▪출산지원금 지급은 **출산율**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장려책 시행의 근거를 제시** - 다만 저학력·저소득 가구에서 모(母)의 노동참여율이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 유의
이스라엘	내용	▪Cohen et al.(2013)은 1999~2005년 중 이스라엘에서 지급된 출산지원금이 임신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	▪분석기간 중 **출산지원금** 지급으로 모(母)의 **임신 확률**은 **0.99%* 상승** *99~05년 중 이스라엘의 평균 출산율(2.0명) 기준 0.02명에 해당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면 **임신 확률**이 **확대** ▪가구 유형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임신 가능성이 여타 가구보다 **크게 상승**
	시사점	▪출산지원금을 **자녀 수 및 가구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
호주	내용	▪Drago et al.(2011)은 2001~2008년 호주의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신생아 1명당 AUD3,000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정책효과를 분석
	결과	▪분석 기간 중 출산지원금으로 인해 출산 확률은 0.03%* 증가에 그침 *01~08년 중 호주의 평균 출산율(1.85명) 기준 0.005명에 해당 ▪아울러 출산율 제고 효과도 일시적인 것으로 분석 ▪가구 유형별로는 **유(有)자녀·저소득 가정**의 **출산율**이 **더 큰 폭**으로 **증가**
	시사점	▪출산장려금 정책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필요 - 출산장려금은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동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
러시아	내용	▪Slonimczyk et al.(2014)은 2000~2011년 중 러시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이 둘 이상의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효과적인지 분석
	결과	▪여성 1명당 0.15명*의 아이를 더 갖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비중**은 **약 10%p 확대** *07~11년 중 러시아의 평균 출산율은 1.52명 ▪지원금 사용처를 부동산 구입, 자녀 교육 등에 한정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시사점	▪**수혜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 현금지급 보다 **사용처를 한정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
스위스	내용	▪Chuard et al.(2021)은 1969~2017년 중 스위스의 **출산지원금 지급**이 **출산율 제고**, **출생아 건강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결과	▪**출산율**은 제도 도입 **첫해**에 **5.5%* 증가**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소멸**하면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침 *69~17년 중 스위스 평균 출산율(1.61명) 기준 0.008명에 해당 ▪**출생아의 체중**은 **첫해**에 **2.8% 늘었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 ▪가구 유형별로는 **모(母)가 저소득(low and middle income) 국가 시민권을 보유한 가정***에서만 **출산율 증가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남 *스위스는 유럽 내에서 이민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동 연구의 분석 기간(1969~2017년) 중 27%를 상회하는 출생아가 스위스 이외 시민권을 소유
	시사점	▪출산지원금 지급이 **아동의 건강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은 출산지원금 지급 정책이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의미

3. 거시적 요인 : 출산 관련 거시지표 개선

□ 출산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문화 등 거시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출산연관지수」를 산출하고, 동 지수의 변화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

○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구성 지표를 선정*하고 각 지표를 표준화하여 개별 지표를 산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

* 자세한 내용은 <참고6> 「출산연관지수 구성 지표 선정 근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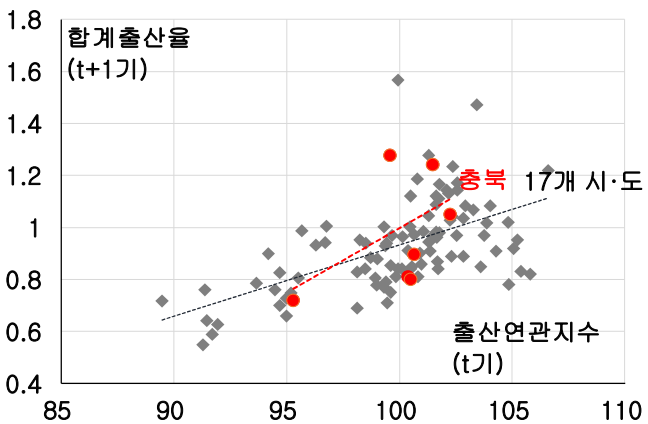
출산연관지수 구성 지표

대분류	소분류	구성 지표	출산율과의 관계[1]
경제	소득	소득(가구당)	+
	고용	고용률, 청년 고용률	+, +
		실업률, 청년 실업률	-, -
		상용직, 비정규직 비중	+, -
	주거	주택 가격	-
		주택구입부담지수	-
		주택 소유율	+
사회·문화	사회	경력단절 여성	-
		인구 밀도	-
	교육	보육시설 수(유아 천 명당)	+
		유치원 원아 수(교원당)	-
		초등학교 학생 수(교원당)	-
		사설학원 수(천 명당)	+
	문화	문화기반시설 수(십만 명당)	+
		체육시설 수(십만 명당)	+

주 : 1) '+'는 정(正), '-'는 부(不)의 관계

□ 충북을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출산연관지수(t기)와 합계출산율(t+1기) 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출산연관지수(t기)와 합계출산율(t+1기) 간 관계



주 : 1) 출산연관지수는 2017~2022년, 합계출산율은 2018~2023년
자료 : 통계청, 자체 시산

□ 충북지역 출산연관지수는 2021년 중 상승 전환(2020년 -0.2% → 2021년 +0.3%) 후 2022년 중(+1.2%*)에는 상승폭이 확대

*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높음

○ 경제, 사회·문화 부문 모두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경제 부문에서는 소득이,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사회가 출산연관지수의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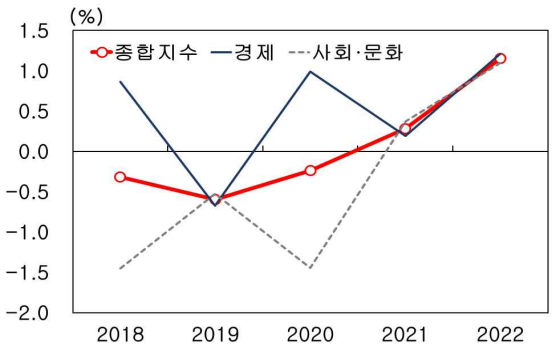
— **(소득)** 2022년 중 충북지역 가구당 소득은 11.2% 늘어나며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

— **(사회)** 인구밀도가 불변인 가운데 경력단절 여성 비중이 전년보다 0.11%p 축소

▶ 구성 지표별 기여도(2022년)
- 경제(+1.2%) : **소득 +1.6%p**, 고용 –0.5%p, 주거 +0.1%p
- 사회·문화(+1.1%) : **사회 +7.2%p**, 교육 –1.5%p, 문화 -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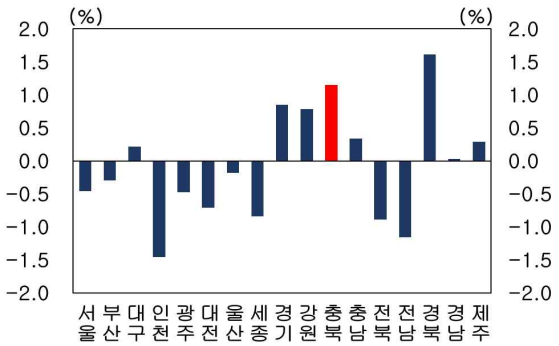
출산연관지수

<충북지역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자체 시산

<시·도별 증가율(2022년)>



<참고6>

출산연관지수 구성 지표 선정 근거

지표	선행연구 등	내용
소득(가구당)	KDI(2024), 국토연구원(2022), 고우림 외(2020), 이삼식 외(2012)	2000년 이후 소득과 출산율 간 정(正)의 관계가 관찰(KDI(2024))
고용률	최선미(2021), 성낙일 외(2012)	결혼 의사는 고용 안정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국가별 패널분석에서 청년 고용률이 낮아지면 출산율도 하락함을 분석(한국은행(2023))
실업률	한국은행(2023), 국토연구원(2022), 이삼식 외(2012)	
청년 고용률	한국은행(2023), 고우림 외(2020)	
청년 실업률	정성호(2010)	
상용직 비중	최선미(2021)	
비정규직 비중	고용안정의 보조지표	
주택 가격	국토연구원(2022), 최선미(2021), 고우림 외(2020), 김민영 외(2016)	시기와 상관없이 주택 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최근 들어 하락 속도가 빨라짐(국토연구원(2022))
주택구입부담지수	주택 구입 시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고금리 환경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
주택 소유율	이재희 외(2020), Dettling 외(2014), Lovenheim 외(2013)	주택 소유율은 주택 가격 상승 시 주택 소유자의 자산 증식에 따른 경제 수준 향상 및 출산 여력 증대 등으로 출산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무주택자의 경우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져 자녀 출산을 지연하거나 억제할 가능성도 상존(이재희 외(2020))
경력단절 여성	KDI(2024)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수준이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일·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KDI(2024))
인구 밀도	한국은행(2023)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청년일수록 희망 자녀수가 유의하게 적게 나타나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일수록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음(한국은행(2023))
보육시설 수(유아 천 명당)	고우림 외(2020), 이재희 외(2020) 민연경 외(2013), 성낙일 외(2012)	보육 및 교육 인프라의 대리변수
유치원 원아 수(교원당)		
초등학교 학생 수(교원당)	이재희 외(2020), 민연경 외(2013)	
사설학원 수(천 명당)	고우림 외(2020), 성낙일 외(2012)	
문화기반시설 수(십만 명당)	박성훈(2022), 민연경 외(2013)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은 거주자 유입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민연경 외(2013))
체육시설 수(십만 명당)	문화시설 인프라의 보조지표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1. 종합평가

□ 2023년 충북지역 출생아 수의 증가 전환은 ①기저효과와 ②인구적, ③거시적, ④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

○ ①혼인과 출산의 추세적 기피 현상과 코로나19의 부(不)의 영향으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의 감소가 크게 누적된 가운데 ②2020년부터 주출산 연령대(25~34세)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혼인 비중이 상승

— 동 연령대 여성 인구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충북의 경우 사회적 인구 순유입이 추가로 기여하였다는 점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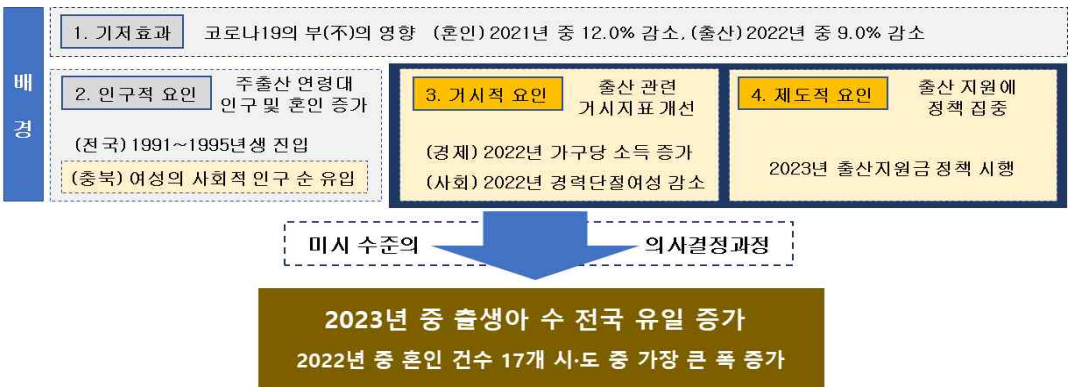
○ 또한 ③2021년부터 출산과 관련된 지역 내 거시적 여건이 점차 개선

— 특히 2022년 중에는 가구당 소득 증가와 경력단절 여성 비중 축소가 출산연관지수 상승폭 확대에 기여

○ 이러한 여건하에서 ④2023년 충청북도는 출산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출산지원정책을 출산 유도에 집중

* 충북의 출산지원금(23년 출생아 당 1,000만원)은 출생아 수가 증가하거나 합계출산율이 상승한 강원(19년 1,440만원), 광주(21년 580만원), 대전(22년 1,080만원)과 마찬가지로 지원 규모가 큰 것이 특징

충북지역 출생아 수 증가 전환의 배경



2. 시사점

□ 충북의 출생아 수 증가 전환 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

1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전략 마련**으로 **거시적 여건**을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조성

○ 이는 지역사회의 소득 창출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축소와 여성 인구 순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 이를 위해 신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 한국은행(2023)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고용불안이 결혼 의향을 통해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분석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불안정 고용 증가를 제시

○ 또한 기업 지원 시 결혼,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출산지원정책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2 충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이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보완**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장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진성(2022)은 소득 계층별 출산율을 분석하면서 저소득층 첫째아를 중심으로 출산지원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

○ 현금성 지원 이외에도 보육 인프라* 및 돌봄서비스 등 출산 이후 육아 부문에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충북형 맞춤 지원 시스템을 개발

* 동일한 규모의 예산 지출 시 출산지원금보다 인프라 예산액 증가가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박혜림(2023년))도 있음

3 아울러 **미시 수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개인이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의 출산에 대한 심층 인식조사 결과(2024)에 따르면 20~40대 조사대상 여성의 52.9%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를 낳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9%)'로 가장 많이 응답#

다음으로 '자녀를 돌볼·양육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12.7%)', '자녀 교육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10.7%)' 등의 순

<참고문헌>

고우림 외(2020), "한국 합계출산율의 결정 요인으로서의 인구밀도",『사회과학 담론과 정책』제13권 제2호.

김민곤 외(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제30권 제2호.

김민영 외(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보건사회연구』제36권 제1호.

김우영 외(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 충청지역을 대상으로",『노동정책연구』제18권 제2호.

민연경 외(2013),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GRI연구논총』2013년 제15권 제3호.

박성훈(2022), "삶의 질은 출산율을 높이는가?",『국가정책연구』제37권 제2호.

박아연(2017), "OECD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보건복지포럼(2017.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진백(2022),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국토연구원.

박창우·송헌재(2014),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추정",『응용경제』제16권 제1호.

박혜림(2023), "지자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제25권 제2호.

성낙일 외(2012),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한국인구학』제35권 제2호.

이삼식 외(201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한국인구학』제35권 제1호.

이인로(2023), "출산장려금 지급 효과 조사 – 해외 연구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은행 충북본부.

이재희 외(2020), "주택가격과 주택공급이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020. Vol. 29, No. 5.

이철희 외(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경제학연구』제70권 제2호.

이철희(2022),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의 이질성 분석: 현금지원 및 보육지원 정책의 소득분위별 효과",『한국경제포럼』제15권 제3호.

유진성(2022),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과학연구 제41권 3호.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사회과학연구』제49집 1호.

조덕상(2024),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KDI FOCUS』, KDI.

최분희 외(2017),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적 경제와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최선미(2021),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 요인 분석", 『국정관리연구』 제16권 제4호.

최혜진(2023), "중앙 지방 간 유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수당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ong 외(2016), "Pro-natalist Cash Grants and Fertility: A Panel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32.2 : 331-354.

고용노동부(2023),「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2),「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_____(2023),「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_____(2024),「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_____(2024),「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한국은행(2019), "유럽 주요국의 출산율 안정화 정책 평가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2023),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2024), "2040세대 10명 중 4명은 출산 유동층", 보도자료.

Ang, Xiaoling Lim(2015), "The effects of cash transfer fertility incentives and parental leave benefits on fertility and labor supply: Evidence from two natural experiment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6 : 263-288.

Becker, G. S.(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NBER.

Chuard, Caroline, and Patrick Chuard-Keller(2021), "Baby bonus in Switzerland: Effects on fertility, newborn health, and birth-scheduling." Health Economics 30.9 : 2092-2123.

Cohen, Alma, Rajeev Dehejia, and Dmitri Romanov(2013), "Financial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5.1 : 1-20.

Dettling et al(2014),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NBER.

Drago, Robert., Karina, Shreffler., Diana, Warren., Mark Wooden.(2011), "Did Australia's baby bonus increase fertility intentions and birth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0 : 381-397.

González, Libertad(2013), "The effect of a universal child benefit on conceptions, abortions, and early maternal labor suppl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5.3 : 160-188.

Lovenheim(2013), "Do family wealth shocks affect fertility choic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May 2013, Vol. 95, No. 2 (May 2013).

Milligan, Kevin(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7.3 : 539-555.

Philipov, D., A. C. Liefbroer and J. E. Klobas(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Springer.

Slonimczyk, Fabián, and Anna Yurko(2014),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aternity capital policy in Russia." Labour Economics 30 : 265-281.